

이재명 “강경 일변도 편향외교 전면 재검토해야”

6·15 남북 공동선언 23주년

“중·러·북 밀착시킨 나쁜 관계” 박광은 “북과 대화 포기 안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15남북 공동선언 23주년을 맞은 15일, “강경 일변도의 대결적 편향 외교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23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편향적인 진영 외교로 한반도를 신냉전의 한복판으로 다시 밀어 넣어서는 안 된다. 평화가 경제

평화가 곧 안보”라고 밝혔다.

그는 “보수 정부가 들어서면 강대강의 대결적 정책이 반복됐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부터는 말길까지 막히고 군사적 긴장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은 현 정권 집권 이후에 한반도 평화와 지역 안정에 핵심축이라 할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경제이익, 안보이익과 배치된다”며 “특히 중국, 러시아, 북한의 관계를 밀착시키는 나쁜 관계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어야 한다”며 “국익중심 실용외교, 실리외교의 원칙을 다시 한 번 되살릴 때”라고 강조했다.

박광은 원내대표는 앞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6·15의 뿌리라 할 수 있는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은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고,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는 노태우 대통령 때 이뤄진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대화를 포기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한미 동맹은 다르지 않다”며 “민주당 정부가 노태우 정부의 평화 정책을 발전시켰듯이 이 정부도 문재인 정부의 경

험을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6·15 정신을 살려서 남북과 한미와 북미가 이미 합의했고, 중국도 동맹인 4자 평화회담을 되살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며 “그래야 대한민국이 한반도 평화의 주인으로 복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진영외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전임 정부의 평화를 위한 노력을 폄하하고, 북한의 군사적 도

발에 강대강으로 대치하며 대립과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이제라도 6·15 남북공동선언 정신을 이어가야 한다. 우리의 발목을 붙잡아온 대립과 반목의 족쇄를 벗고,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길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6·15 남북공동선언은 2000년 6월15일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이 남북 정상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선언이다. 광복 이후 남북 최고 지도자가 합의하여 발표한 최초의 선언으로 자주적 통일 원칙과 경제협력 등 향후 남북한 정부에서 추진할 통일과 협력에 대한 기본 정신을 담고 있다.

서울=김선욱 기자

전남도 동부지역본부 조직개편안 상임위 통과

전남 동·서부 정치권이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전남도 동부지역본부 확대를 담은 조직개편안이 15일 전남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날 전남도가 제출한 동부지역본부 조직개편안을 가결했다.

전남도는 오는 7월 동부통합청사 개청을 앞두고 현재 환경산림국 1개 국을 4개 실국(일자리투자자유지국·문화융성국·환경산림국·여수사건지원단), 320명 규모

로 확대하는 조직개편안을 편성했다.

여수·순천·광양 등 동부지역 출신 도의원들은 동부본부 조직 확대를 환영하는 반면 목포·무안 등 서부지역 도의원들은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조직개편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으면서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조직개편안이 확정되면 동부 지역본부장을 2급으로 격상하고 7월 정기인사를 단행할 방침이다. 최항지 기자

주철현 “여수 등 석유화학단지 지원법 시급”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여수 갑·사진)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돼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주 의원은 “여수 국가산단만 따져도 최근 5년간 121건의 화재와 폭발,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해서 13명이 사망하고 97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또 “여수와 울산 두 곳의 국가산단에서 거둬들이는 세금이 연간 12조

7900억원 규모에 달하는데, 이 중 지방세는 2.9%에 불과하고 국세가 97.1%인 12조4200억원에 달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책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석유화학단지는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주변 지역 환경과 주민 건강에 지속적인 피해를 끼치는데도 별도 지원법률이 없다”며 “정부 입법을 재차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국토종주 자전거길 ‘광주 광산구’ 선정 환영”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구갑·사진)은 15일 “전국 각 지역에 국토종주 자전거길(140km)이 조성되고, 정비사업에 광주 광산구를 비롯한 영산강 자전거길이 선정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광주 광산구 자전거길이 기존 노선 정비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국비 3억 5000만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민관과 함께 광산구 자전거도로 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도로 폭이 좁은 곳이나 시설 노후화, 표지판 부족 등으로 인한 안전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 의원은 지난해 자전거로 여의도~광주간 3박4일 국토를 종단하며 500km 자전거길을 탐사했다. 자전거길이 잘 조성된 지역을 탐방하고, 탄소중립 자전거 메카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해왔다. 서울=김선욱 기자



광주사회서비스원 임원 23일까지 공개모집

광주사회서비스원은 재단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원장과 선임직 이사 8명 등 임원을 공개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원장의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3년이며, 이사의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2년이다.

응시자격과 제출서류, 심사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와 광주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응시원서는 오는 19일부터 23일 오후

6시까지 사회서비스원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공모를 위해 광주사회서비스원은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8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임원후보자 추천을 위한 심사 절차와 방법 등을 심의 의결했다.

광주사회서비스원은 공공기관 구조혁신 대상으로, 오는 8월 중 광주복지연구원과 통합해 운영될 예정이다. 김성수 기자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의원들이 15일 장성 나노바이오연구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전남의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시·도의회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한목소리 촉구

“재생에너지 활용 RE100 실현”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15일 광주·전남을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공동 발표했다.

정부는 7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대상지를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시·도의회는 장성군 나노바이오연구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이행을 촉구했다.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에 공모에는 광주·전남을 비롯한 15개 지자체가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시·도의회는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RE100 실현이 가능한 점, 대상 부지를 확보한 점, 한국에너지공단·광주과학기술원 등 반도체 산업 발전을 이끌어 갈 인프라가 갖춰진 점 등 광주·전남이 가진

장점을 꼽았다.

이와 함께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은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도 강조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을 민선 8기 상생 1호 사업으로 정하고 즉시 착공이 가능한 부지를 확보하는 등 공동 유치전을 하고 있다.

김해나 기자

김기현 대표 “능력 중심의 민심공천 할 것”

취임 100일 기자회견 “사심 배제”

김기현(사진)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사심을 배제하고 능력 중심의 민심공천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특정 계파에 속하지 않고 국민 편에서 서서 불편부당하게 정치활동을 해왔다”며 “그런 경험과 정신을 바탕으로 당헌·당규에 의한 시스템 공천을 철저히 하고 공천과정에 사심 개입이 배제되도록 철저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비정상적 완전한 정상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3대 개혁의 완성은 내년 총선에 달려있다”며 “대한민



국이 G8에 들어가고 이어 G5에 들어갈 기반을 만들 것인지 포퓰리즘에 빠져 희망을 잃은 나라가 될 것인지는 내년 총선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절체절명의 선거인 내년 총선에서 국민 여러분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과반 의석을 차지하도록 더욱 낮은 자세로 매진하겠다”며 “보여주기식 1회용 쇼가 아니라 진정성을 가진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당의 취약지역, 취약세대,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예산을 보다 각별

하게 챙기겠다”며 “더 자주 만나 뵙고 허심탄회한 바다 민심을 들겠다”고 말했다.

질의 응답에 나선 김 대표는 검사 공천설에 대해, “근거없는 기우에 불과하다”며 “검사왕국이 될 거란 이야기는 터무니없는 억측일 뿐이며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일부 친윤계 의원들의 총선분출 가능성에 대해선, “총선 승리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과제들은 그때 그때 적절한 시기에 국민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선당후사가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정관계에 있어 대통령실에 끌려 다닌다는 지적에 대해, “민심의 방향을 대통령실과 협의를 통해 결론을 만들어 원팀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공정과상식 광주전남포럼’ 내일 창립대회

광주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철학인 공정과 상식을 뒷받침하는 보수 성향 시민사회단체가 출범한다.

‘공정과 상식 광주전남포럼’ 창립대회가 17일 오후 3시 광주 동구 금남로 전일

빌딩245 8층 강당에서 열린다.

이날 창립대회에는 박성민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김병민·장예찬 최고위원, 전주혜 원내 대변인 등이 참석한다.

포럼 수석대표인 전주진 전남대 교수는 “지역사회에 건강한 보수의 정신을 착근시키고, 호남의 변화를 위한 담론을 생성하며, 담론이 현실로 이어지도록 조직화해 호남의 발전에 기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김해나 기자